

‘정부주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속도내나

4월 국회 상정 후 제자리...무안 이전 합의로 ‘동력’

이전 지역 지원·중전부지 개발비 등 국가지원 담겨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이전이 합의됨에 따라 정부 책임과 지원을 명시할 군 공항이전 특별법 개정도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중전부

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 의원들과 군 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지난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

간 상태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무안군과의 갈등 등으로 표류하면서 법 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이 추진 중인 대구·경북과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4월 제정된 특별법에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추가 보완했다.

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을 명시했다. 이전 사업과 중전부지 개발에 지

자체(광주시 등)의 부담이 막대한 만큼 이를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으로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설계비·토지보상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이전 주변 지역 사업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에 들어가는 농지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하천정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공유수면 점

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도 면제할 수 있다.

이전 사업 시행자(광주시 등)가 이주자를 위해 생계지원 등을 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중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한도 적용 등이 면제된다.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협상 및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와 정산하게

했다.

광주시는 미군시설의 경우 정부가 이전부터 개발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광주시 등이 해야 할 일(이전 사업·중전부지 개발)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게 했다”며 “이번 군공항 이전 합의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해 특별법 개정을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자치·협치 경험, 초광역협력 모델로 완성”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 토론회

‘시민주권형 패러다임’·특별광역연합 추진 논의

지방자치 30주년 성과를 돌아보고 광주만의 자치와 미래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는 광주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1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성장’과 ‘민선자치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한국 자치분권 30년 평가와 국가균형성장의 방향’이라는 기조강연에서 “광주시가 정부 전략에 발맞춰 국가균형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체감 확대,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의회·지역 정치권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토론회는 정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이 ‘한국의 민선자치 30년 평가와 과제’를,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이 ‘민선자치 30년 광주, 진단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발제했다.

민현정 실장은 “전체 행정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 광주시 성과를 짚으며, 지방자치가 단순한 위임이 아닌 ‘시민주권형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의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좌장으로 6명의 패널이 나와 자치권·시민 주권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6일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최종 의결된 직후 열리면서, 광주·전남 광역협력의 지점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체 참석자들은 원탁 자유토론에서 ‘국가균형성장’과 ‘초광역연합추진전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충청권·부울경 광역연합 사례를 공유하며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을 국가균형성장 선도모델로 완성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30년간 축적한 주민자치와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과 함께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대한민국 해양수산 수도 ‘전남시대’ 구축 속도

전남도가 내년 해양수산 분야 국비를 대거 확보하며 수산업 1번지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수산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의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내년 정부 예산에 6472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국비 확보는 김 산업을 비롯한 해양관광, 항만기반 구축, 해양수산기후변화 대응 등 전남 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반영 사업은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원, 국립해양수산업박물관 설계용역 35억원, 해양환경정화선 신규 건조 4억원,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7억원,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2억원, 광양항 제 품부두 전면항로 준설사업 32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515억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179억원 등 114건 등 6472억원이다.

도, 내년 해양수산 관련 핵심사업 국비 6472억원 확보

김산업진흥원립·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등 반영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은 국가 핵심 식품산업인 김 산업을 종합 컨트롤할 전담기구다. 김 종자 개발에서 기초 연구개발(R&D), 생산·가공기술 개발, 수출까지 김 산업 전주기를 지원하고,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김 산업 주도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또 국립해양수산업박물관 건립을 통해 수산업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전시함으로써 전남의 해양문화 인프라 확충과 체험 기회 확대로 해양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여자인 국가해양생태공원’(총사업비 1697억원)과 ‘어수 북

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총사업비 1조980억원)은 전남도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수산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은 기후위기 시대에 해양환경 변화와 어가 경영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어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전남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전국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재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6년 해양수산 분야 국비 확보는 전남의 수산업을 비롯한 해양관광, 항만 분야 기반 강화를 위한 전반적 예산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남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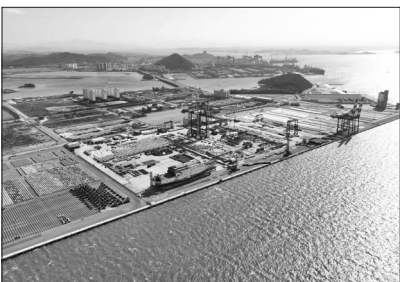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양항 조감도



국립김산업진흥원 조감도



목포수산시장 전경

광주 북구 일동중 삼거리 22일부터 좌회전 제한

도시철도 공사로 내년 10월까지

광주시는 도시철도2호선 2단계 9공구 공사 시행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내년 10월까지 북구 일동중학교 앞 삼거리 좌회전이 제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구간은 좌회전 대기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차로가 축소되면서 교차로 혼잡이 가중돼 일일한 차량 흐름 확보를 위해 좌회전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 동안 해당 구간

을 이용하는 차량은 우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좌회전이 필요한 차량은 약 430m 앞 일곡지구 사거리를 이용해 우회하면 된다.

광주시는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과 우회도로 안내 현수막 설치 등 교통관리 대책을 강구한다. 또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교통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내년 초 출범

시의회, 규약안 변경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이 내년 초로 사실상 연기됐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 변경안’을 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지만, 전남도의회가 지난 16일 뒤늦게 규약안을 처리함에 따라 연내 광역연합 출범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규약안 변경에 나섰다.

당초 규약안에는 ‘연합 사무처리 개시

일을 2026년 1월 1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수정해, ‘규약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광주시는 제안 이유로 “전남도의회에서 사무 개시일을 변경한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동일한 규약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 개시를 위한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 1월 1일 이전 사무처리 개시 준수가 어려워 규약안 변경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출범은 사실상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됐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면 ‘도시철도2호선’서 계속

이어 참석자들은 버스에 나눠 타고 시청을 출발해 광주역까지 이어지는 17km 구간을 순회하며 공구별 도로포장 상태와 교통 흐름, 보행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한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인근 상권에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활동도 펼친다.

시는 금호지구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점심 식사와 장보기를 진행해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2일까지 일부 정거장 구간을 제외한 1단계 도로를 전면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도로 개방은 신뢰 회복의 출발점인 만큼, 이후에도 상권 회복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